

# 견고한 민주주의를 향한 한국의 촛불시위

김동춘(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 1. 2016-2017 촛불시위의 특징

2016-2017 촛불시위는 죽어가던 한국 민주주의를 되살렸고,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한국 정치와 한국사회의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열었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의 온갖 비민주적인 통치행태에 대한 누적된 불만은 한겨레신문-jtbc를 비롯한 언론의 최순실의 권력 개입 사실을 폭로하기 시작하자 거리의 시위로 표출되었다. 국민들의 누적된 불만과 분노- 언론의 촉발 역할 - 가두시위 - 대통령 탄핵 - 새 정부의 탄생의 패턴의 측면에서 지난 가을 이후 일련의 정치변화는 4.19 전후, 87년 6월 항쟁 전후를 연상케 한다.

2016-2017 촛불시위는 사실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등 기존 보수세력의 재집권 전략에서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친박계로는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미 지지를 상실한 박근혜를 내치고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려 하였다. 그래서 탄핵국면에서도 여전히 자본과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보수세력은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거국내각- 개헌- 대선 재승리의 구도로 몰아가려 했다. 그들은 그렇게 정치구도가 잡히면 촛불 시위의 열기는 식어 버릴 것이고, 언론을 통해 대선을 앞두고 야권 후보간에 각종 상호 비방과 공격이 시작되도록 부추기면, 촛불에서 표현된 개혁의 열망은 사그라지고 오직 대선 후보 경쟁만이 남을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다. 그 경우 야권의 분열과 여권의 유력한 후보를 내세우는 전략으로 재집권에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상황은 그들이 기획하거나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2016년 10월 29일 이후 2017년 2월까지 서울의 광화문 일대를 비롯한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지속된 촛불시위는 박근혜정부 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측의 추산에 의하면 연인원 1700만명이 동원되었고, 10월 29일 3만명을 시작으로 2016년 12월 3일에는 최고 230만명 동원되었으며,<sup>1)</sup> 현재의 탄핵 결정이 이루어지는 3월초까지 지속되었다.

한국일보-한국리서치의 조사(1000명)에 의하면 12월 3일 6차 시위까지의 참가자는 조사대상자의 30%에 달했다.<sup>2)</sup> 2012년 대선당시의 시위 참가자와 2016년 12월의 시위 참가자 조사를 비교해 보면, 2012년 당시 약 12%만이 시위에 참가했다고 답했기 때문에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 현장에서 처음으로 이런 집회에 참가한 사람은 약 18%에 달한다. 1,000명 대상의 조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 전체를 정확하게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sup>3)</sup> 그러나 퇴진행동 측이 집계한 총 참가자 1700만 중 대략 500만 정도의 사람들이 생애 처음으로, 2016-2017 촛불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추측된다.<sup>4)</sup>

시위 참가자를 직업별로 보면 학생(45%),화이트칼라(43.3%)의 참가 비중이 높았고, 그 다

---

1) 경향신문, 2017.2.1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122157015&code=9401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122157015&code=94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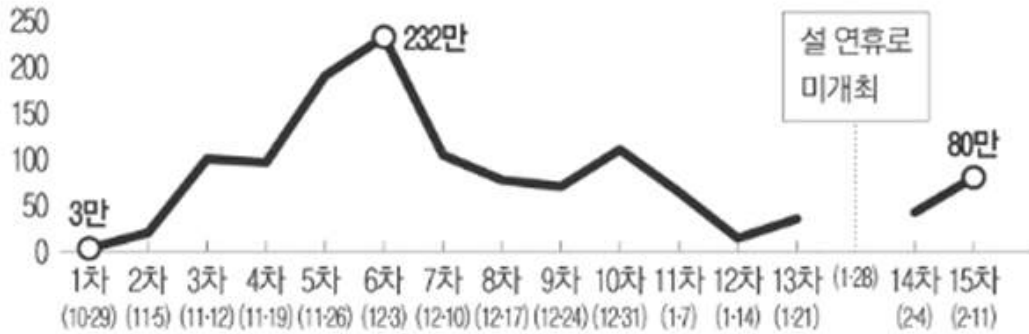
2) 한국일보-한국리서치 조사. 2016.12.9.-10, n+1000)

3) 이 조사는 지역, 성, 연령 비례할당 추출하여 유선 176명, 무선 824명 대상의 전화 전국조사를 한 것이다. 표본오차는 +- 3.1 이다. 한국일보정기여론조사교차분석표, 2016.12.12.

4) 전체 유권자 4000여만 명 중 신체 활동성이 떨어지는 60대 중반 이상의 사람들과 유선 전화로 주로 연결될 수 있는 노령층이나 농촌지역 거주자 등을 제외하고, 선거권이 없는 17,8,9세 청소년을 포함하면 약 3,000만여 명 내외가 될 것이다. 그 중 18%라면 500만 내외가 될 것으로 보았다.

##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 전국 참가 인원 현황

주최 측(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집계 기준



음이 서비스-자영업, 블루칼라의 순서였으며, 연령대는 20대와 40대가 각 44% 정도의 비중이 높았으며, 출신지역은 서울과 호남의 비중이 높았다. 가장 특이한 것은 소득에 따른 참가의 차이였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이 38% 중졸이하가 9.5% 참가했다. 200만원 이하 소득자는 17.9%만 참가했는데 반해, 500만원 이상 소득자의 경우 40%가 참가했고,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의 소득자가 평균인 30% 정도가 참가했다.

결국 2016-2017 촛불시위에는 **고소득, 고학력자 그리고 학생과 화이트칼라, 남성이 주로 참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sup>5)</sup>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촛불시위 참가자는 대졸이상 학력자(68%), 2,30대(45%), 월 300만 이상 소득자(76%)가 주로 참가한 것으로 나왔다.<sup>6)</sup> 그런데 과거의 시위에 비해 50대이상의 참가도 두드러졌다.<sup>7)</sup>

## 촛불 참가자 수

2012년 이전과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참여경험 (단위 : %)



시민역량 불신은 약화, 정치 불신은 강화 (단위 : %)



5) 한국일보-한국리서치 조사. 2016.12.9.-10, n+1000)

6) 촛불집회 참가자 2030세대 45% 대졸 이상 68% 고소득자 76%. [출처: 중앙일보] 촛불집회 참가자

한국일보-한국리서치의 조사에서 시위 참가여부와 관계없이 촛불시위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83%에 달했다. (매우 공감 67.3%), 대체로 공감(16%).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83%)과 거의 일치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언론에 본격적으로 보도되었던 10월 말 당시 이미 박근혜의 지지율은 10%대로 떨어졌으며, 탄핵 혹은 하야해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육박했기 때문에 12월 초에 이 정도로 상승한 것이다. 결국 2016-2017 촛불시위는 사실상 온 국민, 거의 모든 직업과 연령대 국민들의 의지 속에 진행되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은 사실상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데 이 조사에서 나타나지 않은 참가자가 고등학생들이다. 11월 5일 제2차 촛불시위에서 1,000명의 중고생들이 박근혜 하야를 외치며 시위를 했다. 제3차 촛불집회인 11.12일 집회에서는 탐골공원에서 전국청소년 시국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에 2,000여명의 중고생이 참여했다.<sup>8)</sup>예 앞서 11월 1일 대전 둔산동 갤러리아타임월드백화점 앞 집회에는 3000여명의 시민이 참가했는데, 그 중 반 정도가 중고등학생들이었다.<sup>9)</sup>11월 19일 수능 끝난 이후에 수험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1월 26일에는 보신각 앞에서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소속 청소년 400명이 집회를 열고 "청소년의 힘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폐지하고 박 대통령을 퇴진시키자"고 주장했다. 모든 집회에서 청소년들은 단순히 시위의 군중으로 참가한 것이 아니라 직접 단상에 올라가서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촛불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의 최소한의 공감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비판과 분노였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집약된 요구 사항이었다. 여러 번의 시위에서 나온 구호도 박근혜 퇴진, 탄핵, 구속 등을 기조로 하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매우 새로운 구호가 제출되기도 했는데, 새누리당 해체, 이재용 구속 등 박근혜 게이트를 일으킨 여러 책임 주체에 대한 비판의 내용도 포함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대응과 계속되는 부인, 청문회 석상에서의 게이트 주요 관련자들의 극히 오만하고 거부감을 주는 태도 등이 계속 촛불 시민들의 분노를 자극하여 시위의 동력을 제공하였다. 그래서 촛불시위는 검찰과 법원의 어이없는 결정,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황교안 내각의 월권 등의 행태가 드러났을 때, 다시 타올랐다.

한편 주요 공격의 대상, 시위의 장소도 정치권의 대응, 당면 의제의 변화에 따라 이동하기도 했다. 2008년 촛불 시위 당시에도 KBS 앞에 1만 명의 시민이 이동하여 언론의 바른 역할을 촉구하기도 했는데, 2016-2017 시위에서도 국회의 포위, KBS 앞 시위, 헌재 앞 시위 등으로 압력의 대상과 의제에 맞게 장소를 이동하기도 했다.

촛불시위의 직접적 계기는 선출되지 않은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이지만, 구조적 계기는 4년 동안의 박근혜 대통령의 비민주주의 행태였는데, 특히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성에 대한 분노와 좌절감이 자라잡고 있다. 즉 최순실 국정농단, 세월호 참사, 그리고 재벌기업과 박근혜 정부의 유착은 모두가 일관된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민주주의 결손',<sup>10)</sup> 즉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주어진 자신의 권력을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와 법에 맞게 공공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대신,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사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에 있다. 이 점에서 2016-2017 시위는 "이게 나라냐"라는 구호에 집약되어 있

2030세대 45% 대졸 이상 68% 고소득자 76%중앙일보. 2016. 12.7. 1,000명 대상의 조사결과다.

7) 한겨레 신문. 2017.4.2. 한국민주주의연구소의 조사내용. “중도·보수·영남 5070세대 상당수 촛불 참여”

8) 중앙일보. 2016.11.12. [출처: 중앙일보] [11.12, 100만의 함성] 수험생부터 2030세대까지 촛불집회 참여 붐물“

9) 오마이뉴스. 2016.11.1. “대전교육청 '촛불집회' 참여 학생 '사찰' 논란”

10) 에이프릴 카터, 조효제 역, [직접행동 - 21세기 민주주의 거인과 싸우다], 교양인, 2007, 493

듯이 국가를 국가답게, 주권자의 요구에 맞게 운영하라는 요구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국민 주권 박탈에 대한 분노가 참가자들의 주요 동력이었기 때문에,<sup>11)</sup> 2016-2017 촛불시위는 87년 민주화로 개정된 **민주 헌법을 지키라는 요구**가 바탕에 깔려있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기존의 대의제 민주주의 틀을 넘어서는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점도 있었고 국민이 직접 새롭게 헌법을 써야한다는 요구도 깔려있었다.<sup>12)</sup> 대체로 촛불집회는 **거리에서의 “정치적 시민의 탄생”**이라고 부를 만한 큰 변화를 가져왔다.

전 세계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흐름이 나타난 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참가자 수도 행사를 준비한 시민노동단체 연대체인 퇴진행동의 예상을 훨씬 넘어선 것이었다. 그것은 시위라기보다는 축제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국회의 탄핵가결에는 ‘박근혜 닷کم’와 같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누리집이 큰 역할을 했다. 온라인 집단행동은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탄핵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는 효과를 발휘했다.<sup>13)</sup>

2016-2017 촛불 시위는 이명박 정부 이후 후퇴를 거듭하던 한국 민주주의의 가능성과 저력을 보여주었다. 그것이 가진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지난 9년 동안 부활된 권위주의 통치, 공안기관을 활용한 통치 방식에 크게 위축되었던 **한국인들이 정치적 능동성을 되찾았다는 점**이었다. 위의 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촛불시위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역량에 대한 신뢰는 높아졌으며, 정치적 불신 정치의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회의는 커졌다. 이것은 시민 직접정치로서 촛불의 힘을 인정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이렇게 평화적인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경찰이 시위에 대한 강경 진압 방침을 철회했기 때문이며, 서울시장인 박원순이 모든 시위 행사와 참가자에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였고, 법원이 시위 지역을 청와대 바로 앞까지 확대시킨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이미 도덕성을 상실한 박근혜 정권이 북한의 위협 등 전통적 종북 프레임으로 시위를 더 이상 위협할 수 없었던 것도 대규모 동원을 가능케 한 배경이었다.

## 2. 2008년 촛불시위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2008년 이명박 정부 초기 광우병 문제로 촉발된 촛불시위는 87년 6월 항쟁이후 최대의 대중시위였으며, 2002년 효순.미선 사건직후의 시위,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당시의 촛불시위 이후 최대의 시민정치참여였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2016-2017 촛불시위는 여러 가지 점에서 2008년 시위와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우선 시위는 언론 보도를 접한 대중들의 자연스러운 분노에서 시작되었고, 참가한 대중들은 거의 개인 자격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2008년 당시에는 여중고생과 여성등 감수성이 예민하고 전통적으로 시위에 참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주역이 되었으며, 2016-2017 시위 역시 평범한 시민들과 고등학생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다 보니 시위난 매우 비조직적이었으며, 구체적인 요구나 목표를 결집하여 조직적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다소 **분노표출**

11) 헌법을 자신의 문제로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했다(박상훈 인터뷰)

12) 마지막으로 국민이 나서 촛불이라는 비상적 헌법회복 수단을 썼다. 세계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저항권 행사의 모범이다. 세계의 헌정사를 새로 써야 한다. 지금도 촛불은 꺼진 것이 아니다.”(이석연)

13) 2017년 12월1일, ‘박근혜닷컴’이 등장했다. 대통령 탄핵에 관한 의견을 국회의원에게 청원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이 누리집은 공개되자마자 큰 화제를 모았다. 이튿날 실시간검색어 1위에 올랐다. 누리집은 쉽고 직관적이었다. 92만건이 넘는 청원메시지가 ‘박근혜닷컴’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전자우편함으로 날아갔다. 한겨레신문. 2017.2.5

(expressive)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2016-2017 촛불시위는 박근혜 퇴진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구호와 목표가 있었으나 2008년 시위는 표출적 성격이 더 강했다.

2008년 시위는 아고라 그룹, 다양한 인터넷 동호회 등 서로다른 정치적 지향과 관심을 가진 비정형적인 단체와 그 단체와 느슨하게 연결된 개인들이 참가했으며,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우병 대책회의는 행사를 준비하는 역할만 주로 하였다. 이 두 시위 모두 참가대중은 인터넷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소통하여 시위에 참가하였으며 **조직화된 시민운동이나 노조, 정당 등은 오직 주변적인 역할만**하거나, 시위 군중들에게 오히려 외면을 받았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마련한 구호도 대중들을 선도할 수 없었다. 그리고 선도하려고 했을 경우 대중들은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였다. 야당 국회의원은 오직 대중의 일원으로서만 참여하였지 어떤 지도력도 가질 수 없었다. 촛불시위에 참가한 시민은 2000년대 이전까지의 정치적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에 비해 훨씬 더 **개인적이고 또 사회운동 진영의 주도성을 인정치 않으려 했다.**

2008년 시위나 2016-2017 시위 모두 시위대 내부에서 방벽, 폴리스 라인을 넘자는 목소리, 혹은 청와대 전격 목소리가 있었으나 대체로 공권력과 충돌하기 보다는 **평화적 시위**로 가자는 쪽이 대세였다. 그래서 경찰과의 충돌은 있었으나 큰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 두 시위 모두 시위와 축제가 결합된 양상을 지녔다. 그래서 매번의 현장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만들어낸 각종 구조, 전시물 등에는 **풍자와 해학**이 넘쳐났다. 해학과 풍자를 주도한 사람 중의 하나인 미술작가 최항은 “단순한 정치혁명을 넘어 모든 권위적인 것들과 끈대스러운 것들을 거부하는 문화적인 움직임”이라고 표현했다. 14) 가족단위 참가가 많았던 것도 이것에 축제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다. 즉 “즐겁지 않으면 감동이 없다”는 구호처럼 언제나 문화공연이 열렸다. 참가의 위험부담이 적고, 긴장도가 낮았기 때문에 이런 동원이 가능했으며, 또한 대중들 역시 축제로서의 즐거움이 때문에 더 많은 수가 참가했다고 볼 수 있다.

2008년의 시위는 **휴대폰**을 통한 온라인 동원이 큰 역할을 하였으며, 그것이 2016-2017에는 카톡방의 형태로 더욱 확산되었다. 즉 2008년과 달리 2016년에는 휴대폰의 시대를 넘어 **스마트 폰을 기반으로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SNS 정치참여**가 일반화되었다. 이것은 시위 참여자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대중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양상과 동일한 측면이다. 2016-2017 시위가 사회단체의 지도를 거부하고 개인성과 익명성, 비조직적인 방식으로 진행된 것은 그에 앞서 시작된 이화여대의 시위에서 이미 드러났다. **지도와 조직에 대한 거부감**은 새로운 세대, 특히 여성들의 문화의 기본 특징이었고, 2000년 이전의 정치적 성격을 갖는 시위 혹은 사회운동과 가장 구별되는 점이였다.

이것은 2008년이나 2016년 모두 특정 집단, 계급, 혹은 특정 주체가 시위 참여자의 주요 구성원을 차지할 수 없다는 사실과 연관되어 있다. **2008년 당시에는 ‘국민’이 가장 많이 등장한 개념이었다면, 15) 2016-17년은 ‘시민’**이라 할 수 있다. 학생, 중산층이 주역이라는 점에는 1960년 이후 한국의 도시 시위와 유사하지만, 그들을 특정의 사회적 범주로 묶기는 어렵다. 1987년 6월 항쟁과 그 이전 시기는 휴대폰이 보급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대학가의 대자보나 조직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집회가 조직되고, 동원도 조직적으로 이뤄졌었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주력의 역할을 했다. 그러나 휴대폰의 시대, 스마트폰의 시대에는 그것을 통한 선전과 동원이 가능해졌고, 따라서 대학생이나 특정집단이 시위의 주요 세력이 될 수 없었다. Jtbc와 같은 방송매체, SNS를 통한 시위 관련 뉴스의 확산과 온라인 소통의 공간 확대

14) 한겨레신문, 2017.2.5. ‘벚꽃엔딩’ 부르기 전에 끝내고 싶어! 촛불 100일 인터뷰

15) 김연수, [2008년 촛불항쟁 담론 연구 : 인터넷 응집주체와 진보적 지식인의 담론을 중심으로], 성공회대 사회학과 석사논문, 2010, 156

도 시위의 지속에 큰 영향을 주었다. '집단지성'은 2008년에서 2016-17을 묶어주는 공통의 주제, 행위 개념이다. 그것은 지도에 대한 거부, 자율성에 대한 찬양이다.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2016-2017 촛불시위는 2008년의 시위와는 차별적인 점도 있다. 2008년 촛불 시위는 이명박 정권 초기, 이명박 정부의 대미 쇠고기 협상과정에서의 각종 의혹과 미국 축산업계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협상 결정, 이명박 대통령의 사대주의적 태도,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경시 태도에 대한 분노에서 촉발되었으나,<sup>16)</sup> 2016년 시위는 박근혜 정권 말기에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저질러진 온갖 실정에 대한 총체적 분노와 거부감이 바탕에 깔려있다. 그리고 2008년 시위는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였고, 대통령의 퇴진을 전면적으로 제기하지 않았으나 2016년 시위에서는 최순실 게이트가 폭로된 직후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통령 퇴진 혹은 구속을 요구하였고, 그것은 지배적인 여론을 반영한 것이었다. 2008년 시위는 '먹거리 문제'라는 다소 비정치적 생활 이슈를 중심으로 동원되었으며, 그래서 여학생, 주부 등 여성의 참여나 가족단위 참여가 두드러졌다.

2016-2017 촛불시위는 정권 말기에 터져 나왔고, 대통령 선거라는 가시적 정치변화의 기대와 맞물려 있었다. 정권초기에 터져나온 2008년 촛불시위는 참여자의 사회적 성격이나 구호에서도 비정치적인 성격이 강했지만, 이후의 선거정치에도 별로 영향을 주지 못했다. 2016 10월 말의 경우 검찰 수사, 현재의 판결, 정치권의 탄핵 결정을 압박할 수 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정권교체 등 정치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다. 촛불시위에 참여한 대중들의 폭이나 주요 구호, 대중들의 요구 사항에서 볼 때, 2016-2017 촛불시위는 2008년 촛불시위는 물론 직선제 개헌을 요구한 87년 6월 항쟁당시의 시민들의 폭과 요구보다 훨씬 넓고 깊다. 이명박 정부의 미국 쇠고기 협상에 대한 분노에서 시작된 2008년 촛불에 비해서 정치성이 훨씬 강하고 구호도 매우 다양했으며 더 오래 지속되었다. 탄핵 정국이 오래 지속되고, 특검의 조운선, 김기춘, 우병우 대상의 수사가 진행되고, 언론의 추가적인 폭로가 지속되면서 촛불시위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2008년 촛불시위나 2016-2017 시위의 촉발 요인은 달랐지만, 그 구조적 배경은 사실상 동일하다. 즉 한국에서 대중들의 직접 행동을 통한 정치적 의사표출은 제도정권이나 사회적으로 요구를 제대로 대표할 수 없는 현실, 정당의 문제해결 능력의 부재, 대통령과 국회 등 정치권의 책임정치의 부재가 그 구조적 배경이다. 즉 대중들이 직접 행동을 통해서 정책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권력자의 퇴진을 압박하는 것 외에는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절박감 때문에 대중들이 시위에 참여하게 된 셈이다. 그런데 대중의 직접행동을 통한 정치변화의 요구라는 점에서 2017-2017 촛불시위는 사실상 87년 6월 항쟁, 그 이전의 도시의 가두시위에 나름대로의 연속성을 갖고 있다. 특정 정치세력이 평소에 준비해서 일으킨 혁명이나 총파업 혹은 대중적인 저항이 아닌 모든 자연발생적 시위가 그러하듯이, 과거 4.19 학생 데모나 6월 항쟁, 지금의 촛불시위는 그 요구를 직접 정치권에 전달하거나 스스로 정치세력화될 수 있는 어떤 대표부도 없으며, 군중들의 행동도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고 아무런 제도적 변화를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공통된다.<sup>17)</sup>

16)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어둠은 빛을 이길수 없습니다 -2008년 촛불의 기록], 한겨레출판, 2008, 12-13

17) 1960년 4.26 이승만 하야로 인한 국정 공백 상태인 점이 유사. 그러나 1 공화국 내각 수반(외무부장관)이 승계,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 독자적 정치적 기반이 없었으나 양당 추대로 취임. 야당이 요구했던 내각제 개헌, 그리고 국회 구성을 위한 선거 준비에만 치중. 1공화국 청산에는 손을 대지 않음. 단 6.25 양민학살 진상규명 요구가 빗발쳐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기도 함. 사실상 붕괴한 자유당은 야당인 민주당과 개헌에 합의하여 자신의 정치생명을 유지하려 함.

촛불시위는 기본적으로 **대중의 직접행동을 통한 압력, 행동화된 여론, 혹은 집단적 청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집합 행동이 중지될 경우 여전히 제도적 힘을 갖고 있는 기성권력의 반격, 포섭 분열 공작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특검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도 특검의 의지에 달려 있었고, 탄핵결정도 다수의 보수파로 구성된 헌법재판관이 내리게 되어 있으며, 각종 개혁입법은 4.13 총선으로 구성된 각 당의 방침과 의지에 달려있으며,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각 정당과 후보 진영의 전략에 달려 있다. 정당정치의 기능 부재, 관료와 사법의 기능 부재, 언론의 극도의 편향 등 국가나 시민사회의 모든 기관이 실질적으로 대중들의 불만이나 요구를 대변하지 못한 조건이 촛불시위의 구조적인 배경인 셈이다.<sup>18)</sup> 즉 조직화되지 않는 대중의 집적 행동은 **여론의 압력**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기존의 정당과 국가기관을 일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을 갖고는 있으나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그것은 기성 권력을 무너뜨릴 수는 있으나 새 권력을 만들어낼 수 없다.

과거 1960년 당시 4.19는 학생들의 주도로 이승만 하야를 이끌어냈지만, 곧바로 진행된 7.29 총선이나 정치일정에 거의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4.19 학생데모나 6월 항쟁이 결국 보수세력의 재집권으로 나아갔다. 이승만이 하야하자마자 집권당인 자유당은 해산되었고, 권력 장악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판단한 당시 민주당은 개헌과 총선에만 몰두하였다. 그래서 부정 선거, 학생 시위대에 대한 발포 책임자 처벌 등의 시급한 현안은 뒤로 밀렸다. 결국 민주당이 집권은 성공했으나 아무런 준비없이 집권했던 탓에 5.16 구테타를 일으킨 박정희 군부에게 권력을 넘겨주고 말았다. 한편 1987년 6.29 선언은 전두환, 5공세력, 재벌 군부 등 당시 기득권 세력의 양보에 의한 야당, 저항세력 포섭전략이라 볼 수 있는데, 6월 항쟁에 의해 전두환 대통령을 곧바로 추방하거나 단죄하지 못하고, 모든 법과 정부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 그리고 민선 대통령 선거가 모든 이슈를 집어 삼킨 결과, 노태우로 대표되는 기존 정치세력은 선거를 통해 재집권을 할 수 있었다. 물론 과거의 시위가 현실 정치세력이 될 수 없는 학생이 주도한 한계가 있었고, 2016-2017 촛불시위는 시민이라는 점에서 차이는 있지만 한국에서의 도시시위는 모두 '비정치적 대중'에 주도되었다는 점에서 제도 정치와 분명히 거리가 있었다.

물론 2016-2017 촛불시위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라는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지 않았더라도 당시의 야당 후보가 2017 대선 당선되어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은 컸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만으로 촛불시위의 효과는 나타났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촛불시위의 효과는 재정권 이후의 개혁조치의 추동력으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시위는 마무리되었고, 정권은 교체되었으며, 정권은 과거의 적폐청산을 최대의 과제로 설정했고, 국회는 헌법 개정 논의를 시작했지만, 이 모든 일정은 87년에 수립된 민주주의의 틀 내에서 진행되고 있을 따름이며,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아니다.

1960년 4.19 시위에서부터 그러하였듯이 대중들의 비조직적인 저항 행동은 체제 내적 비판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체제가 허용한 정당성의 폭을 넘어서지 않았다. 2008년 당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구호는 87년 민주헌법의 형식화된 문구를 내재적으로 전취하여 실질화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는 있지만, ‘이념의 빈곤에 기인한 교육지책’의 측면이 있다.<sup>19)</sup> 2016-2017의 촛불시위 역시 행동에서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자는 대중 직접

18) 이번 사건은 “책임 정치의 기반이 없는 대통령중심제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었고, 그러면서 입법부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했다. 박상훈, 2016 촛불집회와 정당 정치- 정당체계의 민주화와 다원적 정당 정치, (<http://www.kdemo.or.kr/blog/610/post/1293>)

19) 김정한, “촛불의 정치학 - 대중운동과 제도정치의 새로운 순환”, [그대는 왜 촛불을 끄셨나요], 산책자, 2009

행동의 양상을 지니고 있지만, 실제 구호에서는 철저하게 87년 헌법의 틀을 인정하면서 출발했고 요구 내용도 그것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2016-2017 시위는 87년 헌법 즉 자유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국민주권의 원칙을 완성하자는 요구로 집약되었다. 참여한 대중들도 박근혜 퇴진이나 구속 요구에서는 합의를 이루었지만, 이 시위를 거치면서 새로운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거나 직접 민주주의의 구호를 내걸지는 않았다.

2008년 촛불시위는 곧이어 열린 7월 31일 서울의 교육감 선거로 연결되지 않았다. 그것은 광우병 의제와 고육 의제의 거리감 때문일수도 있지만, 촛불시위가 선거정치와 연결고리가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2010지자체 선거에서 야당이 약진했지만 그것이 촛불시위의 결과라고는 보기 어렵다. 진보정당 혹은 새로운 대안정당 창출과는 거의 무관했다. 촛불의 의식은 기성 정당으로 결집될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했다. 2016-2017년 시위와 박근혜 탄핵은 새누리당을 해체 분열시켰다는 점에서 2008년과는 분명히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이후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높은 지지로 연결되었다. 영남지역에서의 자유한국당의 입지 약화, 더불어민주당 당원 증가는 이 시위가 가져온 가시적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러나 2008년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정당정치, 청년들의 조직화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대중의 직접참여의 움직임은 있는가? 각 지역에 조직된 청소년 단체가 대표적이다. 일부 촛불 시민은 한겨레 신문을 지원하거나 시민단체에 가입하기도 했다. 그것은 개헌, 선거법 개정 등의 논의에 대중들이 어느정도 관심을 보이는가를 보면서 측정가능하다. 우선은 제도권 정치 일정으로 촛불의 열망이 어느정도 제도화되었다. 촛불 시민은 탄핵국면이 대선 국면으로 이동하여 언론이 대선 경쟁구도 중심의 보도를 하고, 대선 각 후보의 인물을 비교하거나, 야권 유력 후보 때리기 보도를 반복하면서 그 구도에 흡수되었다. 그러나 촛불시위를 통해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행동의 필요성을 느끼는 층도 다수 형성되고 있다. 즉 광장의 정치는 시위의 경험을 통해 획득된 군중들의 정치의식과 집단 정체성을 어떻게 조직된 시민의 힘으로 전하시킬 것인가의 고민을 안고 있다. 박근혜 퇴진, 탄핵의 압박은 현재가 그것을 결정해버리는 순간 동력을 상실할 것이기 때문이다.

### 3. '광장정치'와 민주주의 공고화 문제

결국 촛불시위는 한국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주었으나 동시에 한국 정치가 갖는 구조적 제약, 즉 정당 활동, 정책 개입, 그리고 마을에서의 정치 참여 기회의 제한 등 선거밖 정치의 부재를 거꾸로 보여주었다. “지금 우리가 의견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 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에서 거리에 나온 국민들의 목소리가 그것을 말해준다.

87년 민주화 30년이 지났지만, 권위주의 시절 이래로 지속되어 온 한국의 중앙집권적, 대통령중심의 정치, 정당의 취약한 역할,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의 취약한 연결고리를 그대로다. 보수독점의 정당구조를 깰 수 있는 진보적 신생정당의 진입은 실패로 끝났다. 특히 정당정치는 사회적 요구를 대변하거나 갈등을 조정하거나, 국가와 사회의 비전을 만들어어나가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지금의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정권의 각종 반헌법적, 탈법적인 권력행사, 특히 국정원 등 공안기관의 가시적인 불법행동이나 검찰의 정치 편향 등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정권에 대한 비판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국민적 논의를 생략한 사드배치, 일본과의 위안부 협상 등 국가의 주권과 관련된 핵심적 사안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으며,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했다. 더 민주당은 탄핵 결정 때도 그러했지만 정치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했고, 박근혜 정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국가적 개혁과제를 제



출하지 못했다. 촛불 시민 행동은 몇 언론의 폭로에 의해 촉발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당 특히 야당의 역할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우려했던 대로 2016년 말 탄핵 국면이 2017년 초 대선 정치국면으로 전환된 이후 제도정치권의 일정이 모든 정치적 관심을 흡수했다. 대선에서 정권교체의 기대, 특히 각 후보 진영간의 경쟁이 박근혜 정권 이후의 정치사회 개혁 이슈를 거의 흡인하였다. 87년 6.29 선언이후가 그러했듯이 정국의 주도권은 촛불시위에서 대선 후보 진영으로 급히 옮겨갔다. 즉 탄핵국면에서 대선국면으로 이행하자마자 제도정치와 광장정치는 분리되었으며, 대중의 직접 행동이 제도정치에 반영될 연결고리는 사라졌다. 그리고 각 언론은 언제나 그렇듯이 정책을 둘러싼 공방보다는 후보들 기인의 퍼스넬리티나 지지율 변동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광장의 시민들의 개혁요구는 오직 후보들의 공약에만 반영되는 방식으로 제도정치와 연결되었다.

이미 2016년 탄핵국면에서도 새누리당과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는 후보 진영은 광장정치를 잠재우고 개헌과 대선 중심으로 구도를 잡으려 했다. 여러 대선 후보들도 87년 등 과거의 실패에 대해 성찰을 하고 있으나, 각 선거 캠프는 국가나 사회의 개혁의 비전을 내세우기 보다는 자기 후보의 집권과 권력이익에 더 치중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들은 박근혜 게이트가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내각제 개헌을 해서 제약적 대통령제를 없애자는 논리를 내세웠다. 촛불시민, 특히 퇴진행동 측은 이후의 개정될 새 헌법에 포함되어야 할 개혁과제를 제출하였지만, 개헌을 직접적인 요구로 제기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촛불시위가 주권 회복의 요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2016-2017 촛불시위는 대중의 '집단 청원'의 성격을 갖는다. 촛불시위는 정치나 사회의 전반적인 개혁을 원한다는 국민의 의사를 보여주었으나 그 청원적 성격 때문에 **시민혁명으로 발전하기는 못했다**. 그것이 시민혁명이 되기 위해서는 구정권을 대중의 압력으로 퇴진시키는 것 이상의 정치변동의 요구를 제출하거나 그것을 성사시켜야 했다.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정권을 교체했다는 점에서 체코의 벨벳 혁명(sametová revoluce) 혹은 신사혁명과 비교하기도 한다. 체코의 경우 공산주의 체제를 붕괴했다는 점에서 혁명으로 부를 수 있으나, 촛불시위는 비폭력 대중행동이라는 점을 제외하고서는 정권이 아닌 정치체제의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새누리당이 분열된 이후 남은 자유한국당의 의식이 여전히 107석인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혁명에 준하는 과감한 개혁을 실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래서 **촛불시위가 정치적인 차원에서 촛불혁명으로 발전되는 것은 여전히 남은 과제이지 완성된 형태는 아니다**.

광장정치의 익명의 주역들이 시민 주권 쟁취의 열망, 그리고 정치사회 개혁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집된 개혁요구로 만들어야 하고, 촛불시위에서 보여준 **대중의 능동성을 국회에 대한 압박,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압박으로 전화시켜야 했다**. 그러나 대선 이후의 모든 정치 이정은 혁명적 상황의 지속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런 위기감 때문에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일부 지식인과 사회운동 단체는 광장의 정치가 대선 후보 진영으로 분열되기 이전에 탄핵, 대선 국면에서 성취해야 할 최소수준의 목표와 기준에 대한 합의를 하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들은 촛불시민의 요구와 의사를 수렴하여 10대 개혁 과제 등을 구체화한다음, 각 대선 후보들이 이에 대한 찬반여부, 입장 표명을 하도록 요구하여,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후보들이 그 정책을 공약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하거나 국민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자는 제의를 했다.<sup>20)</sup> 그러나 정국의 주도권이 정치권으로

20) 부정선거 무효화, 개헌, 총선 준비가 과도정부의 임무. 당시 허정이 1공화국 각료였기 때문에, 그리고 독자적인 권력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3.15 부정선거 사범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이고 여기에 분노한 부상학생들이 국회에 난입하기도 함.

넘어가는 마당에 시민들의 서약요구의 동력은 크지 않았다.

여기서 광장정치가 단순한 정권교체 즉 제도정치의 일정을 바라보기만 해야하는 상황에 빠지지 않고 개혁의 동력으로 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당정치 주도론이 제출되었다. 이것은 2008년 촛불시위 당시에도 제기되었던 것들이다. 박상훈 최장집 교수 등이 주장한 제도정치 정상화론, 정당강화론이 그것이다.<sup>21)</sup> 입법부, 정당의 역할 부재가 촛불시위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타당한 진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단과 대안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정당정치를 강화할 것인가의 문제의식이 생략된 서구 대의제 민주주의 당위론에 그친 감이 있다. 그리고 이미 유럽에서도 정당의 대표성이 약화되고 포퓰리즘이 득세하는 등 대의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으며, 시민의 직접 정치참여, 사회운동적인 기반이 없는 엘리트주의 정당정치의 변질 등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부족하며, 한국에서 정당정치를 지속적으로 위협해온 분단/전쟁 상황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박근혜 이명박 정치는 국정원 정치였고,<sup>22)</sup> 87년 민주화 이후에도 그 정치적 개입이 강화된 것도 한국의 분단/전쟁 상황에 기인한 것이다.

제도권 정치, 즉 국회가 주권자인 시민의 압력을 받아 여러 가지 개혁 입법을 협의하고 통과시킬 가능성의 하나는 지역사회다. 이미 국회의 탄핵 결정과정에서 시민들은 지역구 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고, 새누리당 의원들도 그것을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탄핵결정에 동참하기도 했다. 특히 친박계 비박계 의원의 지역구의 시민들은 박근혜 게이트를 초래한 데 대한 새누리당의 정치적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그러한 압력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 즉 일부 지역구민들이 의원들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행동보다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조직적으로 의원들을 호출하여, 박근혜 게이트를 초래한 데 대한 당과 의원 개인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그 동안의 입법활동에 대한 검증과 평가를 함과 동시에, 촛불시위의 요구를 어떻게 의정활동에 반영할 것인지를 묻는 자리가 필요했다. 그러나 그것은 지역의 조직된 시민단체가 주도를 사안이었다. 즉 익명의 촛불시민의 요구를 수렴해서 대변하는 지역 시민사회운동의 활동의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광장 정치와 제도 정치를 매개하는 지역 시민사회의 힘은 극히 취약했기 때문에 이 역시 지속되기 어려웠다.**

즉 광장정치, 촛불시위로 정치적 시민이 탄생했으나, 그 시민은 ‘직적 행동’ 시민이거나 선거 때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 시민일수는 있어도 헌법과 선거법 개정 등 의회정치에 개입하거나 지역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은 아니다. 이것이 촛불시위의 다음 단계로 진화하는데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한다.

## 5. 촛불시위는 ‘이중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나?

**촛불시위의 저류의 동력은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에 대한 분노와 희생자에 대한 공감**이었다. 세월호 참사와 구조 실패는 박근혜 정부의 모습을 온 국민에게 폭로한 사건이었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는 촛불시위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극히 중요한 고리가 된다.

세월호 급변침의 원인은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세월호 운항 과정은 불법과 부패로 가득차 있었다. 그것은 이명박 정부의 선박 규제완화와 관련된 신자유주의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감시 규제 기능을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넘겨버린 점에

---

21) 박상훈, 2016 촛불집회와 정당 정치-정당체계의 민주화와 다원적 정당 정치 <http://www.kdemo.or.kr/blog/610/post/1293>

22) 김동춘,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정치” [경제와 사회], 2014년 봄.

서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 이래 **국가기관과 사적 이익집단의 유착, 공공관이 후자에게 포획된 것과 관련이 있다.**<sup>23)</sup> 이것은 국가가 저항하는 시민에게 폭력을 가한 과거의 달리 힘없는 시민을 버린 것으로 볼 수 있다.<sup>24)</sup> 세월호 사고 직후 분명히 구조를 책임지는 선상에 있던 사람들은 승객 구조보다는 다른 문제에 더 신경을 쓰고 있었다.<sup>25)</sup> 즉 해경이 기술적인 이유 혹은 알 수 없는 다른 이유로 승객들의 구조를 포기했다.<sup>26)</sup> 미군 측의 구조 제안을 거부한 것, 통영함이 출동하지 않은 것, 민간잠수사 투입을 거부한 것은 만약에 드러날지도 모르는 침몰의 원인, 그리고 구조과정의 책임을 은폐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304명의 학생과 승객들 중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최대의 실책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상명하달식 권위주의 관료조직 문화를 부활시켰기 때문에 현장 지위자의 대응과 구조를 어렵게 하였고, 미디어의 독립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등 절치적 민주주의를 위배하는 정치를 해 왔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보도나 신속한 구조를 어렵게 만들었다. SNS를 통해서도 광범위하게 유포된 구조과정의 의혹들과 문제점들이 공중파와 종편에서는 거의 방영되지 않았다. 처음부터 유족들의 항의나 집단행동에 대해 경찰은 강력하게 제지하기 시작했고, 일부 적극적 개인들의 행동을 감시하기 현장에서 정부의 구조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람을 명예훼손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이 유족을 감시, 사찰하고 일부 개인이나 단체가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였다. 이후 집권당은 세월호 특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물론 구성된 이후에도 사실상 조사를 하기 어렵게 사사건건 개입했다.

결국 세월호 사고가 참사로 발전되면서, 단순한 안전사고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건은 곧바로 정치화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하게 해양사고, 혹은 박근혜 정권의 대처 실패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자체에 대한 국민의 질문으로 연결되었다. “이게 나라냐”라는 촛불시위의 주요 구호는 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기관의 총체적 무능을 질타한 것이었다. 그 점에서 촛불시위는 표층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요구가 제기되었지만, 그 심층에는 국가의 기능회복 혹은 기존 한국의 국가의 전면 개조의 요구가 깔려있었다.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국가개조’의 큰 공약을 내세운 것도 바로 촛불시위의 심층적 요구를 나름대로 의식한 것이었고, 다른 편으로는 정치가로서 자신의 생각을 표출한 것이기도 했다.

촛불시위가 세월호 참사에서 발원했다고 할 경우, **세월호 참사는 시장의 실패의 측면보다는 국가의 실패의 측면이 강하다.** 그렇다면 이것은 폴라니(Polanyi)의 ‘이중운동’의 성격과는 거리가 먼 것일까? 폴라니의 이중운동은 자기조절적 시장의 작동의 붕괴 혹은 모순의 결과로서 나타난 사회의 자기방어 운동을 지칭한다. 그것은 노동과 자연을 시장에서 구입가능한 것으로 본 시장주의에 맞선 사회의 자기방어의 운동이다. 이것은 사회속의 존재로서의 인간, 혹은 자연과의 교통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회복하려는 운동이기도 하다. 그것은 사회가 시장의 일부가 되려는 것을 거부하는 운동이기도 하다. 이중운동은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한 사상적

23) 유종성, 박연민, “여객선 안전규제에 나타난 정부-산업 간 유착과 포획 - 박정희 정권의 국가조합주의 유산과 세월호 비극”, 서재정 외, [침몰한 세월호, 난파하는 대한민국- 압축적 근대화와 복합적 리스크], 한울 아카데미, 2017.

24) 김동춘, “국가부재와 감정정치”, [팽목항에서 불어오는 바람], 현실문화, 2015

25)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명령만 기다리느라 유리창 한 장 깨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김삼열 전목포시해양심판원장의 증언. 오마이뉴스, 2014.10.15

26) 생존 화물차 기사 김동수 씨는 발언을 통해 “이 나라 방송은 다 거짓말”이라며 “내가 세월호에서 나와서 진도체육관가서도 해수부 있는 자리의 123정 선원에게도 배안에 2~300명 있다고 얘기했고, 노란 점퍼 입은 해수부 직원들한테도 거둬 2~300명 있다고 얘길 해도 (자신의) 말을 전혀 믿질 않았다.”고 지적한 뒤 “해경도 헬기타고 와서 딱 한 학생 데리고 올라간 후로 내려와 보지도 않았다.”고 질타했다.(생존 화물차 기사 김동수씨, 서울의 소리, 2014.11.30)

실천적 비판이고 계급들 간의 충돌인 셈이다.

세월호 참사가 단순한 신자유주의 기조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며, 박근혜 정부의 기조가 시장만능주의라기 보다는 특정 기업과 정부의 유착, 그리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협회에 맡기고 공공기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본다면, **세월호 참사,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시장주의의 무차별적 확산의 결과라기보다는 시장주의가 극도로 굴절된 방식으로 작동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즉 국가의 정당한 감시, 개입, 규제 자체를 포기한 결과 오히려 시장에 작동하지 않고 특권적인 사적 이익집단들이 임무를 포기한 결과 나타나는 것이 세월호 참사였다. 그렇게 보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분노나 허탈감은 시장의 세력, 즉 해운협회나 각종 이익단체에 향하기보다는 국가를 향하게 된다.

박근혜 정권은 단순히 재벌을 비롯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사실상 공권력을 도구화하고 정부는 한편으로는 정치적 반대세력에게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행사했던 방식과 유사한 배제와 탄압 정책을 펴면서, 이들 거대 이익집단에게는 거의 포획되었다. 경찰의 백남기 농민 물대포 발사, 백남기 사망사건이 보여주었듯이 저항세력에게는 더 노골적인 폭력이 행사되었고, 대학 등 공공기관은 더 노골적인 이익추구 기관으로 변질되어 이화여대 학생들의 시위가 터졌다. 즉 관료, 사법부 등 공권력이 이익집단에게 더 노골적으로 포획되자 그래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졌다. 즉 특권적 영역과 무한 경쟁 영역이 이원화되어, 무한경쟁의 강도는 더 강화되었다. 이것은 시장논리가 오직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하게 작동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세월호 참사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집약해 준다.

즉 촛불시위에 참가한 청년들,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발언 (“부모 잘 만난 것도 능력”)에 분노한 **청년들은 시장, 경쟁, 능력에 대해 거부한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경쟁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 능력주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 분노했다.** 즉 정유라가 그들과 함께 경쟁하지 않는 사실에 주목했다. “우리 친구들 정말 힘들게 입시 준비하는데, 정유라는 아무런 노력 없이 명문대를 들어가고 국가대표가 됐다”고 분노하였다.<sup>27)</sup> 결국 이들은 시장, 경쟁, 능력의 원칙을 깊이 내면화했다. 그래서 촛불 시위에서 “한국 사회의 변화를 원하는 동력의 일부는 체제 변혁적 열망이지만, 나머지 상당 부분은 능력주의에 입각한 체제 정상화 열망”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지난 20여년을 거쳐오는 동안 능력을 사실상 유일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과잉 능력주의’가 자리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28)</sup>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2016년 12월 17일, 서울시청 인근의 스페이스노아에서 100여명의 청년들이 시민평의회를 개최하였다. 그들은 한국사회가 헬조선인 이유는 ‘불안한 미래’(18.8%)와 ‘경제적 불평등’(18%)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 외에도 경제적 안전망 부재와 무한경쟁을 강요하는 사회, 사회 공동체의 붕괴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다. 결국 청년들이 촛불시위에 공감을 표시한 이유는 단순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분노, 혹은 박근혜 퇴진의 요구보다는 이 이면의 불안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sup>29)</sup> 한편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한 가지를 바꿀 수 있다면”이라는 물음에 대해 “평등사회 실현”(19%)에 가장 큰 점수를 주었다. 즉 모든 조사에서 청년들은 고용불안을 가장 큰 걱정거리로 여기고 있었다.

대체로 촛불시위에 참여한 청년들은 시장주의의 작동 그 자체를 거부하기 보다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새로운 사회의 전망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한국의 촛불시위는 민주주의의 일탈에 대해서는

27) 광장에서 만난 62명의 목소리...“대통령에 실망, 시민에게서 희망”, 한겨레 21, 2016.11.27

28) 한겨레 21, 2017.1.5. ‘×망의 해’ 청년의 2017년

29) 김민수, “불평등한 시대, 청년이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 [참여사회], 2017년 1.2월호

큰 의미가 있었지만, 오늘의 신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대안적 운동의 성격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물론 아직 시장의 작동을 체험하지 않는 청소년이다. 시장주의 이전의 한국사회를 체험한 50대 이상의 사람들은 2,30대 보다는 시장주의를 덜 내면화했다.

대체로 한국의 촛불시위는 '민주주의 결손'을 매운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신자유주의 모순에 대한 직접적인 항의인 서구나 각 나라에서의 '점거'(occupy) 운동과는 결을 달리하고 있다. 그것의 화살은 주로 정부, 정권을 향했고 제도정치의 복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 정부의 행태가 사익집단의 포획된 것으로 일관한 점, 재벌에 대한 비판이 촛불시위에서 매우 자주 등장한 점에서 촛불시위는 간접적으로는 이중운동의 측면을 갖고 있으며, 한국 정당정치의 기능 부재에 대한 매우 집단시위의 연장선에 있다.

## 7. 견고한 민주주의를 위한 과제들

촛불시위는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볼 때 미래지향적 운동이라기보다는 87년 민주화 체제를 제대로 실시하자는 운동이었다. 추운 겨울날 거리를 매운 시위대, 특히 처음으로 이런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박근혜 정부가 헌법상의 민주공화국의 이념을 위반한 것을 "참을 수 없어서" 거리에 나왔다. 그래서 이 시위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책임정치를 실현하자는 운동이었다. 그래서 이것은 꺾데기 만의 87년 민주화, 민주헌법의 정신을 지키자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시위의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민주주의의 한 걸음 진전에 대해 눈을 떴다.

촛불시위 이전인 2015년과 촛불시위 이후인 2017년 청년대상의 조사를 실시한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유일하게 2015년보다 높아진 항목이 '사회참여역량지수'다. '투표 등 나의 참여가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이 62.7%에서 77.4%로, '정치가 바뀌면 나의 삶도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이 72.7%에서 76.3%로 높아졌다. 이에 힘입어 사회참여역량지수도 2015년 64.3점에서 72.97점으로 꺾춤 뛰었다. 이것은 촛불시위를 통해 정치적 효능감, 정치적 능동성을 부분적으로 되찾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위를 통해 형성된 정치적 능동성은 다른 방식의 출구로 향할 잠재력을 갖게 되었다. 만약 그 출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 능동성은 그대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거나 사그라들 수도 있다.

촛불시위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정치 참여의 필요성에 눈을 떴다. 이들은 그 동안 자신들이 정치에는 관여해서는 안되는 학생으로만 정체성을 갖고 있었으나 이 시위를 목격하고 참가하게 되면서 자신들도 시민이며, 정치적 주체라는 사실을 자각했다. 그것은 청소년에게 참정권 보장 곧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어야 한다는 요구로 결집되었다.

특히 한국의 시민의식의 주류를 형성해 온 성장주의, 기독교 보수주의, 인물중심 정치관이 한국인들의 낮은 정치의식과 깊이 관련되어 있고, 이런 문제는 학교 민주시민교육, 지역사회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전면적 확대를 통해서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촛불시위를 통해 불공정한 현실에 눈을 쓴 청소년들의 발언은 체계적인 시민교육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었다. 언론개혁, 교육/노동개혁을 통해 새로운 노동주체와 시민적 주체, 이론 사상적 주체를 육성하는 작업도 시작되어야 한다.

그래서 박근혜 탄핵과 구속, 이재용 구속, 보궐선거를 통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은 촛불시위의 중요 성과이지만, 첫걸음에 불과했다. '거리에 나온 정치적 시민', '정치적 효능감을 자각한 시민', '능동성을 되찾은 시민', '처음으로 시민임을 자각한 청소년'들이 어떻게 정치적 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는가에 촛불시위의 성패가 달려 있다. 일차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여부를 통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지난 10년 동안 쌓은 '적폐의 청산'

을 통한 개혁의 완수, 특히 헌법과 선거법의 개정, 재벌체제의 개혁과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의 변화 여부를 통해 그 성패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위가 대의제 민주주의의 결함, 한국 정당정치 구조적 기능 부재에 대한 집단 항의와 대안 마련의 요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복원으로 그 임무를 완수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사회력, 즉 시민사회의 자력화를 통한 풀뿌리 정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종합하면 사회력, 혹은 시민사회의 자력화와 시민정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정치가 바로서려면 그 사회적 기반이 있어야 한다. 사회력(사회적 힘)이란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 보통의 사람들이 연대를 통해 강자에게 맞설 수 있는 힘, 그리고 자신의 대표를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사회력은 사회조직과 구성원들의 자율성, 책임성, 공공성, 혁신능력, 학습능력, 도덕적 역량, 공감능력을 포함하지만 기업의 활동이 노조, 소비자, 공공의 이익을 존중하고, 공공 복지기관, 협동조합, 각종의 시민기금이 약자들의 버팀목을 해 주어야 한다. 경제적 부가 세습되고,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들의 자생력이 없는 곳에서 사회적 혁신이나 활력, 기술의 발전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 <참고문헌>

- 김동춘,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정치” [경제와 사회], 2014년 봄.  
김동춘, “국가부재와 감정정치”, [팽목항에서 불어오는 바람], 현실문화, 2015  
김민수, “불평등한 시대, 청년이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 [참여사회], 2017년 1.2월호  
김연수, [2008년 촛불항쟁 담론 연구 : 인터넷 응집주체와 진보적 지식인의 담론을 중심으로], 성공회대 사회학과 석사논문, 2010,  
김정환, “촛불의 정치학 - 대중운동과 제도정치의 새로운 순환”, [그대는 왜 촛불을 끄셨나요], 산책자, 2009
- 박상훈, “촛불집회와 정당 정치-정당체계의 민주화와 다원적 정당 정치”  
<http://www.kdemo.or.kr/blog/610/post/1293>
- 에이프릴 카터, 조효제 옮김, [직접행동-21세기 민주주의 거인과 싸우다], 교양인, 2007  
유종성, 박연민, “여객선 안전규제에 나타난 정부-산업 간 유착과 포획 - 박정희 정권의 국가조합주의 유산과 세월호 비극”, 서재정 외, [침몰한 세월호, 난파하는 대한민국- 압축적 근대화와 복합적 리스크], 한울 아카데미, 2017.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어둠은 빛을 이길수 없습니다 -2008년 촛불의 기록], 한겨레출판, 2008,  
중앙일보 조사. 2016.12.7.  
한국일보-한국리서치 조사. 2016.12.9.-10